

주간 통일정세

2016-10

Contents

I.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외교안보
2. 대내 정치
3. 경제
4.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한미훈련에 “총공세 진입할 것” 위협…국방위 성명(3/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7일 발표한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우리의 생존공간을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에 전면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성명은 이어 “적들이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이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핵전쟁도발로 간주된 이상 그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될 것”이라며 “정의의 핵선제 타격전은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에서 지적한 순차대로 실행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 성명은 또한 “우리에게는 존엄높은 최고수뇌부가 비준한 남조선해방과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우리식의 군사작전계획이 있다”고 강조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침공 단행하면 도발 본거지 불바다 만들 것”(3/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논평 ‘우리의 경고를 오관하지 말라’에서 “미국과 괴뢰 역적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연습과 고강도 제재를 운운하며 제아무리 기고만장해 있어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통신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생존공간을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 도발광기에 전면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했다”며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무진막강한 우리 공화국을 감히 어찌 보겠다는 것이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실전 배비(배치)된 핵무기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군사적 공격수단들은 최고 수뇌부의 남조선 해방, 미국징벌 작전계획에 따라 남조선 작전시대 안의 주요 타격대상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 기지들, 미국 본토를 정밀 조준하고 섬멸적인 발사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함.

- **北핵과학자 “우리 수소탄, 맨해튼 떨어지면 주민 전체 즉사”(3/13, 조선의오늘)**
 - 조형일이라는 이름의 북한 핵과학자는 13일 ‘조선의 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오늘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된 핵탄(핵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수소탄(수소폭탄)이 대륙간탄도 미사일에 실려 미국의 뉴욕 맨해튼 상공에 떨어진다면 주민 전체가 즉사하고 온 도시가 잿더미로 되고 만다”고 위협함.
 - 기고문은 “이전 구소련이 시험한 수소탄이 100km 밖에서도 3도 화상을 입을 정도의 열을 발생시키고 후폭풍이 1천km 떨어져 있는 건물의 유리창을 깨 정도 였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수소탄위력은 그 정도에 비할 바 없이 크다”고 강조함.

- **北전략군 “혼합장약구조로 제작된 핵탄두, 모형 아니다” 주장(3/13, 조선의오늘)**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한 자리에서 공개한 핵탄두가 모형이 아니라고 북한군 관계자가 13일 주장함.
 - 북한 인민군에서 미사일부대를 총괄하는 전략군의 김태철 군관은 13일 ‘조선의 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거대한 열핵반응을 순간적으로 일으키는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 제작된 핵탄두들을 장착한 선군조선의 핵무기들은 군사의 군자도 모르는 천치들이 꾸며대는 뒤떨어진 모형이 아니라 세계가 아직 알지 못하는 최첨단 군사장비들”이라고 말함.
 - 그는 그러면서 “이미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둔 공격수단들이 실전배비(배치)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미국 본토를 과녁으로 삼은 강력한 핵타격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있다”고 위협함.

다. 회담 관련

- **“北 광명성4호, 작동 불능 추정”(3/9, 노스코리아테크)**
 - 북한이 지난달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주 궤도에 진입시킨 ‘광명성 4호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노스코리아테크가 9일 전함.
 - 매체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한 이후 위성이 찍은 단 한 장의 사진도 공개하

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으며, 또 인공위성을 전문으로 추적하는 네덜란드 마르코 랑브루크 박사가 촬영한 ‘광명성 4호’의 사진도 공개함.

- 랑부르크 박사는 사진 분석을 통해 “광명성4호는 계속해서 텀블링(자체적으로 뒹구는 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北, ICBM용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물체’ 사진 공개(3/9,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9일 대륙간 이동식탄도미사일(ICBM)급인 KN-08의 탄두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원형(구형)의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 사진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연구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사진을 여러 장 내보냈으며, 이 사진에는 북한이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탄두 모형이 뒹푼 KN-08 미사일 4~5기가 나타남.
- 김 제1위원장은 KN-08 탄두 설계도면 앞에서 관계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기도 했으며, 북한이 이 설계도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정확히는 식별되지 않았지만, 소형화된 핵탄두의 기폭장치를 원형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함.

■ 北매체 “광명성4호, 지구관측 준비중” 주장(3/10, 메아리)

- 북한 민간단체 아리랑협회가 운영하는 매체 ‘메아리’는 10일 보도에서 “광명성4호는 3월 7일 오전 9시까지 지구 주위를 442회 돌고 우리나라 주변 상공을 122회 통과하면서 궤도 및 원격측정소들과 통신했다”며, 지난달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주 궤도에 진입시킨 ‘광명성4호 위성’이 최근까지 지구를 442회 돌았으며 지구 관측을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함.
- 매체는 “광명성4호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로부터 조종 지령을 받아 전원상태조종과 정밀자세조종, 온도조종, 촬영기정수조정 등을 진행하면서 지구관측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탄도로켓 타격계획도’공개…남측 타격위협 의도 분석(3/11,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 발사훈련 참관 소식을 전하면서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이란 제목의 지도 사진을 공개함.

- 이 지도에는 평양 아래 황해북도 황주군 지역부터 동해상으로 2줄의 탄도미사일 비행궤적이 그려져 있으며, 발사지점과 탄착지점으로 보이는 곳에는 여러 개의 숫자가 표기되어 있지만 북측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정확히 식별되지 않고 있으나, 발사지점과 탄착지점의 좌표나 비행 거리 등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라. 대미국

■ 美 “북한 핵위협 심각히 간주…도발적 언행 중단하라”(3/8,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북한 국방위원회가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선제적 핵타격전’을 거론한 데 대해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심각하게 간주한다”며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미국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위협) 발언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역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발언을 삼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함.
- 또한 미국 국무부는 이날 대북 제재의 목표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과거 이란에 적용했던 엄격한 제재기준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 블레어 “北, 핵무기로 공격하면 美 보복받아 정권 끝날 것”(3/11, 미국의소리)

- 블레어 전 국장은 1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공개하며 선제공격 가능성을 위협한 데 대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인 일본, 한국에 핵무기 공격을 한다면 극도로 무모한 일일 것”이라며 “보복공격을 받아 북한은 완전히 파괴되고 정권은 끝날 것”이라고 경고함.
- 이어 그는 “만일 핵무기와 같은 끔찍한 무기를 이용한 공격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감행된다면 미국이 보복에 나서서 북한이 무기를 추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란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함.

마. 대중국

- **中외교부장 “3~5자 접촉에 열린 태도…北핵개발은 타협불가”(3/8, 연합뉴스)**
 - 왕 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인 8일 베이징(北京)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도움만 된다면 우리는 각국이 제기한 3자, 4자, 나아가 5자 접촉까지를 포함해 모든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또한 그는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책(방책)으로 병의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해야 한다”며 단순히 제재와 압력을 맹신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함.
 - 이어 이런 점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을 제안했다고 소개한 뒤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확고부동한 목표이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와 관심사항”이라고 주장함.

- **中, ‘김정은 똥보3세’ 검색차단 해제…대북 제재 일환?(3/9,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돌입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롱하는 호칭에 대한 인터넷 검색어 차단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뉴스는 중국 네티즌이 김 제1위원장을 비판할 때 부르는 이름인 ‘진싼팡즈(金三 반(클반. 月+半)子)’가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에서 그동안 검색이 안되도록 차단돼 있었으나 9일 오전 현재 원활하게 검색되고 있다고 전함.
 - 연합뉴스 독자가 바이두에서 진싼팡즈가 검색된다고 알려와 확인 결과 진싼팡즈는 약 25만 건, 접미사인 ‘자(子)’ 자를 뺀 진싼팡은 약 220만 건이 바이두 포털에서 검색돼 바이두측이 검색 차단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중국, 입항한 北선박 10일부터 귀환 차단…선박교역 전면금지”(3/9, 산케이신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회의의 대북 제재 결의를 수용해 중국 정부가 자국에 들어온 북한 선박이 돌아가는 것도 차단할 방침을 밝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중 무역 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미 입항한 북한 선박이 북한으로 귀항하는 것을 10일부터 금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밝힘.

- 신문은 중국이 북한 선박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며, 또한 중국은 본토의 모든 항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목록에 오른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의 입항이 확인되면 조사하고 압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北 김영철, 유엔제재 결의전 러시아 극비 방문”(3/11,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김영철 비서가 베이징을 거쳐 모스크바로 날아가 러시아 당국자들과 유엔 제재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시켰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김영철 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 키를 쥔 상임이사국 러시아를 움직여 결의안 채택에 제동을 걸기 위한 외교적 행보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함.

아. 국제기구

- “유엔제재 북한 선박 상당수 레이더망서 사라져”(3/8, 미국의소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31척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 3~4일을 기점으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방송이 7일 화물 및 여객선의 해상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최근 24시간내 위치 정보가 파악된 북한의 제재 대상 선박은 7척에 불과했다고 전함.

자. 기타 국가

■ 홍콩, 안보리 제재대상 北선박 ‘골드스타 3’ 입항 거부(3/10, 연합뉴스)

- 홍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10일 중국 대북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9일 정오께 홍콩항에 입항하려던 북한 화물선 ‘골드 스타 3’의 정박을 거부했으며, 골드 스타 3는 연료와 선원용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홍콩에 입항하려고 했지만, 홍콩 정부가 안보리 제재를 사유로 정박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전함.

-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관련 ‘수소탄 보유국, 위성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선 우리나라(北)에게는 제재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며 ‘제재 따위로 우리의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주장(3.7, 중앙통신)
- 리수용(외무상), 3월 8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31차 회의(제네바) 참가 후 귀환(3.8, 중앙통신·중앙방송)
- 루마니아 사회주의당 대표단(단장 : 콘스탄틴 로타루 위원장), 3월 8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3.8, 중앙통신·중앙방송)
-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 3월 6일 김정은의 시리아 3월8일혁명 53주년 축전(3.3)에 대해 답전(3.8, 중앙방송·중앙통신)
- 美 핵미사일(미니트맨-3)시험발사(2.25) 관련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제창하던 자들이 핵무기고의 필요성과 핵무기사용을 떠들어대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난(3.9,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일본군 성노예범죄 등 관련 ‘일본이 제 아무리 오그랑수로 피비린 과거범죄를 미화 분식하려 해도 특대형 반인륜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 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3.9, 중앙통신·민주조선)
- ‘피델 카스트로 루쓰’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訪北 30돌에 즈음한 기념집회, 3월 9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3.9, 중앙통신)
- 김기남(黨 비서), 3월 9일 로므니아 사회주의당대표단과 담화(3.9, 중앙통신)
- 미국 주재 일본 대사의 발언(北-美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교섭하지 말아야 함) 관련 ‘평화협정 체결은 일본 따위가 끼어들어 시비하며 참견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철두철미 北-美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3.10, 중앙통신·노동신문)
- 루마니아 사회주의당 대표단, 3월 10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3.10, 중앙통신)
- 루마니아 사회주의당 대표단(*3.8, 訪北), 당창건사적관·주체사상탑·과학기술포럼·미래과학자거리·옥류아동병원 등 참관(3.11,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제를 피로써 복수하려는 각오와 원수 격멸 소탕의지, 적들의 제재와 봉쇄도

산산조각 내리는 신념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반제계급의식'이라며 '모두가 반제 반미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계급의 전위투사로 준비해 나갈 것'을 호소(3.12, 중앙통신·노동신문)

- KR/FE연습 관련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주체적 전법이 있다'며 '핵전쟁도발은 곧 미국의 종국적 멸망으로 된다는 것이 미 오바마일당에게 보내는 최후 경고'라고 주장(3.12,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ICBM(미니트맨-3)시험발사(2.25) 관련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 평화수호정책이 아니다'며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고 세계제패를 다그치기 위한 부정의의 정책, 압살정책, 지배정책'이라고 비난(3.12, 중앙통신)
- 루마니아 사회주의당 대표단(단장: 콘스탄틴 로타루 위원장), 3월 12일 귀국(3.12, 중앙통신·중앙방송)
- 홍기철 캄보디아 주재 北 대사, 3월 9일 주재국 국왕(노로돔 시하모니) 작별 방문(3.13, 중앙방송)
- 쿠바 근로자 중앙대표단(단장 : 올리세스 길라르테 데 나시미엔토 총서기), 3월 13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3.13, 중앙통신·중앙방송)

2.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핵 폭발시험·핵공격능력 향상 시험 계속” 지시(3/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 폭발시험과 핵공격능력 향상 시험을 계속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김 제1위원장이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관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야 한다”며 “핵탄 적용수단들의 다중화를 힘있게 내밀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언제 훈련을 참관했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10일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참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훈련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참석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루마니아 대사에 리병두 임명(3/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리병두 루마니아 주재 대사를 새로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루마니아 주재 조선특명 전권대사로 리병두가 임명됐다”고 전했다, 리 대사의 구체적인 약력을 알리지 않았음.

- **“북한, 김석철 미얀마 대사 본국소환”…한미 제재대상(3/10, 연합뉴스)**
 - 우리 정부와 미국에 의해 현직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제재대상에 오른 김석철 주미얀마 북한대사가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우리 정부는 지난 8일 대북 독자제재 당시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을 금융제재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김석철 대사를 제재명단에 포함했으며, 정부 당국자는 10일 “김석철 주미얀마 북한대사가 이달 중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설명함.

- **김춘국 駐이탈리아 北대사 간암 사망…“건강검진도 못 받아”(3/13,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유럽국장을 지낸 김춘국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가 지난달 22일 간암으로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김 대사는 평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간암 판정을 받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다 현지에서 사망했다”며 “간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이미 말기 상태여서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국제제재에도 4월 평양서 ‘친선예술축전’(3/1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TV는 1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영상에서 “화창한 4월의 봄날에 조선에서 세계 예술인들의 대예술축전이 진행된다”며 “(우리는) 인류 공동의 이 예술축전을 가리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라고 부른다”고 밝힘.
 - 그러면서 “세계 5대륙의 명망 높은 문화계 인사들과 이름있는 예술단체들, 개별적인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으

로 오고 있다”고 덧붙임.

- 이어 매체는 행사 기간 평양대극장과 동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 모란봉극장, 윤이상음악당, 평양교예극장에서 다양한 작품이 공연된다면서 “조별공연, 단독 공연, 연환(친선)공연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당대회 앞두고 기강잡기…“70년대 당일꾼처럼 투쟁”(3/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1면 사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꾼(일꾼)들처럼 살며 투쟁하자’에서 “모든 문제를 당의 유일적영도체계 확립의 견지에서 보고 대하며 그와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사건화하여 날카로운 투쟁을 벌리는 일꾼이 우리 당이 바라는 지휘성원”이라고 밝힘.
 - 신문은 이어 “자기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은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꾼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의 근본 핵”이라며 당대회를 위한 모든 사업을 김 제1위원장이 ‘가르쳐주신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 또한 “당적원칙성과 투쟁력이 강한 일꾼들이 있는 곳에서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내부로부터 좀먹고 우리 혁명의 전진에 제동을 거는 위험한 사상독소들이 서식할 수 없다”고 덧붙임.
- 北, 유엔제재 비난에 연일 주민동원…“달갈로 바위치기”(3/8, 통일신보)
 - 북한의 대외 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8일 ‘그 어떤 제재로도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를 게재함.
 - 평양시 평천구역인민위원회 부원 김혁철은 “우리는 지난 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온 날이 없지만 할 것은 다하면서 살아왔다”며 “우리는 끄떡하지 않는다. 시간이 증명해줄 것”이라고 주장함.
 - 국가과학원 연구사 김봉철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노도쳐 전진하

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겠다는 것은 곧 썩은 닭알(달걀)로 천년바위를 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강위력한 주체의 위성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 여성의 날(3.8) 106주년 기념 전국 가두여성(주부)들의 체육경기, 3월 5일부터 7일까지 평양체육관에서 진행(3.7,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핵무기연구부문 과학자·기술자들 만나고 핵무기 병기화사업 지도(3.9, 중앙방송·중앙통신)
- ‘3.8국제부녀절’ 106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3월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최룡해(黨 비서 보고)·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김용진(내각 부총리)·김정임(당 역사연구소장)·김정순(「여맹」위원장)·여성일꾼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3.8, 중앙방송·중앙통신)
- ‘아시아축구연맹 여성축구의 날(3.8) 2016’ 즈음 행사 진행 및 여러 체육단 여성 감독·지도교원 등 참가(3.8, 중앙통신)
- 제31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식, 3월 9일 현지에서 진행(3.9,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영남배수리공장·남포항·평양역 현지요해(3.10, 중앙통신)
- ‘당 제7차 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최단기간에 최대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과학기술전’이라며 ‘모든 과학자·기술자들은 우주과학자·기술자들처럼 최첨단 돌파전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함으로써 과학기술 대승리로 당 제7차 대회를 빛내이자’고 강조(3.10,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일 애국주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애국자로 키워주며 투쟁의 활력을 부여하는 위대한 사상정신적 무기’라며 ‘천만군민을 참다운 애국의 한길로 떠밀어 주는 근본바탕’이라고 주장(3.10,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광훈(조선요리협회 부원), ‘김일성 생일(4.15)’을 맞으며 진행될 ‘사탕조각 전시회(인민봉사총국 등 참가, 자연의 동식물과 건축물 등 형상) 준비사업 전개’ 소개(3.11, 중앙통신)
- 北, 첫 우표발행(‘46.3.12) 70돌 기념우표(소형전지 2종) 발행(3.12, 중앙통신)

3.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국제 제재에도 5·9월 두 차례 국제상품전 계획(3/7, 내나라)

- ‘내나라’는 7일 “평양 서성구역에 위치한 3대혁명전시관에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19회 춘계 평양국제상품전시회를, 같은 장소에서 9월 5일부터 8일까지 제12회 추계 전시회를 각각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매체는 “1958년 4월 17일 이후 50년 넘게 국내외에서 수백 차례 상품전시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사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 친선과 협력을 촉진하고 무역거래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 매체에 따르면 이들 행사에는 안보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광물의 채취 장비와 가공기술이 전시되며, 건설기계와 건축자재, 에너지·환경보호·운송 사업, 통신과 정보 기술, 농업 장비와 기술, 식음료 및 생산기술, 인쇄 및 포장기계, 의료 기구와 제약장치, 조명기구, 소비재, 자동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함.

■ “북한 당국, 대포통장 만들라 지시했다”(3/8, 연합뉴스)

-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과 거래하는 현지인이나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담긴 전통문을 해외사업 담당 부서에 보냈다고 8일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블루유니온은 이 조치를 이달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했다고 뉴스는 전함.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북한, 제재 회피하려고 중국 은행 이용”(3/9, 포린폴리시)

- 북한이 무기거래 등의 불법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은행을 우회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보도함.
- 미국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P)가 입수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친포(Chinpo)’라는 이름의 싱가포르 선사는 중국 최대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Bank of China)’의 싱가포르 지부에 계좌를 두고 있으면서 북한 기업들을 대신해 수백차례에 걸쳐 대북 송금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친포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북한 기업들을 대신해 총 605차례에 걸쳐 4천만 달러 이상을 북한 쪽에 송금 했으며, 또 2013년 7월에는 파나마의 한 선사에 7만2천 달러를 보냈고, 이는 미사일과 전투기 부품을 포함한 대량의 무기를 싣고 가다가,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청천강 호(號)의 파나마 운하 통행비용인 것으로 알려짐.

■ **FAO “北 식량부족분 96% 미확보”...식량부족국가 재지정(3/10, 미국의소리)**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식량 부족분 가운데 무려 96%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함.
- FAO는 전날 공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이라는 제목의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한 34개국을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44만에 이르지만, 지난 달 초 현재 1만7천600t을 확보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함.

■ **북한 “제재·전쟁 책동 속에서도 생산 초과달성” 주장(3/10, 조선의오늘, 조선중앙방송)**

- 조선의오늘은 10일 ‘백두산 대국은 이렇게 돌진한다’ 기사에서 “적대 세력들의 날강도적인 제재 소동과 무모한 전쟁 책동에 불굴의 정신력과 자강력으로 맞서 나가는 정의로운 인민의 강용한 기상이 온 나라에 차 넘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오는 5월 초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전력과 광물 등을 초과 생산했다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70일 전투’가 시작한 지난달 23일부터 보름 동안 비료를 기존보다 1.6배, 평양철도국은 수송량을 1.4배, 룡양광산은 마그네사이트 광석을 1.2배 많이 생산했다고 설명함.
- 앞서 조선중앙방송도 지난 3일 ‘인민경제 여러 부문, 2월 계획 초과 완수’ 기사에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생산 계획이 초과 달성됐다고 보도함.

■ **“北, 아프리카서 담배농사 외화벌이”(3/1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짐바브웨 주재 북한 무역

대표부 주도로 현지농장에서 잎담배를 재배해 수출한 뒤 거기서 번 돈을 북한 당국으로 송금한다”며 “농장에서 거둬들인 잎담배의 일부는 중국인 명의를 위장업체를 통해 북한으로 들여간 뒤 북한 내에서 위조담배로 제조돼 수출되기도 한다”고 보도함.

- 이어 담배농사를 통한 잎담배 수출 및 불법 담배 제조로 벌어들인 외화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 또는 핵과 미사일 제작을 위한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방송은 분석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올해 1월 북한-미국간 교역 전무”(3/8, 미국의소리)

- 지난 1월 북한과 미국간의 교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방송은 미 상무부 통계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악화일로 걷는 북미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지난해 같은 기간 북미간 교역액은 약 14만 달러였으며, 또 지난해의 전체 북미간 교역 규모는 약 480만 달러로 전년도의 약 20%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 중국 내 북한은행 ‘전무’…안보리 금융제재 효과 의문(3/8, 연합뉴스)

- 현재 중국 내에서 영업 중인 북한은행은 사실상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융제재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사상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 있는 북한은행 지점을 90일 이내에 폐쇄하고, 신규지점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나, 한 소식통은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중국 내 북한은행 자료를 찾아봤지만, 단 한 곳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고, 북중 관계에 밝은 외교소식통 역시 “(정식은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 뉴스가 전함.

- 방직공업부문, ‘다추다기대운동’(*노동자들이 보다 많은 방추와 직기를 맡아 생산

- 성을 높이려는 운동) 전개 및 생산성과 선전(3.7, 중앙통신)
- 농업부문 일꾼·과학자·기술자들,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먼거리 영농기술 문답 봉사체계(농업성-각급 농업지도 기관들-협동농장들간 컴퓨터망 연결, 화상회의 등) 확립 및 곧 시작” 예고(3.8, 중앙통신)
- 국가자원개발성 리계동 부국장, 15일 동안 공업생산액 120%, 지질탐사 100% 수행 보도(3.9, 중앙통신)
- 각지 탄광들, ‘새형의 밀폐형 탄차바퀴 도입’으로 석탄 생산성 1.5배로 증가(3.10, 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3월 첫 열흘 동안 전국적인 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배 장성되었다’고 보도(3.13, 중앙통신·중앙방송)

4.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탈북여성들 “北에 인권이란 말 없다…여성, 노동력 착취수단”(3/7, 연합뉴스)
 - 탈북여성단체인 뉴코리아여성연합(대표 이소연)이 세계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간호사, 열차 방송원, 협동농장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탈북여성들은 북한 내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에는 인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노동력 착취의 수단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또한 이소연 대표는 “북한 독재정권은 북한 주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여성들을 유린하고 자기들 체제에 맞게 사육하는 비정상적 정권”이라고 강조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한, 휴대전화 해외통화 차단... 걸리면 강제수용소 간다(3/9, 연합뉴스)**
 -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가 북한이 주민들을 옥죄려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AI는 ‘북한: 허락되지 않은 접속’(한국어판 제목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정권이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면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가 심하게 제약받고 있는 실태를 공개함.
 - AI가 2009년 이후 탈북해 한국·일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7명과 법률가·사회학자·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전문가 19명과 인터뷰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는 300만 명이 넘었지만 국영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의 해외 통화를 차단하고 있다고 전함.

마. 사회 동향

- **“北 주민 사이서 ‘제2 고난의 행군’ 불안감 확산”(3/7,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제2 고난의 행군’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방송은 함경북도의 소식통을 인용해 “2월이 되면서 경제 제재가 구체화되자 주춤해진 상품유통이 최근에는 눈에 띄게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청진시의 대형시장으로 알려진 수남장마당과 포항장마당은 상품 유통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최근 들어 장마당에 ‘제2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동안 안정적이던 식량 값마저 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함.
- **“유엔제재로 北 주민 불안감 확산...돈주들 쌀 사재기”(3/8, 데일리NK,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관련 내용이 북한 내부에서 퍼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8일 보도함.

- 북한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손전화(휴대전화)를 통해 삼시간에 퍼졌다”며 “주민들은 예전의 유엔 제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면서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함.
- 또한 함경북도 지방의 한 무역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 황해도에서 농사가 망해 쌀 가격이 오른다고 소문났을 때도 돈주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대북 제재로) 분위기가 다르다”며 “어떤 돈주는 수천 달러어치의 식량을 사두기도 했다”고 말함.

■ **북한 바둑인구 3만여 명…“바둑신동 다수 배출”(3/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주체 78(1989)년에 조선바둑협회가 조직되고 평양바둑원이 창설되었다. (1991년) 국제바둑련맹(연맹) 가입 이후부터 우리 선수들이 여러 국제바둑경기에 적극 진출하여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면서 “우리 바둑 선수들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함.
- 현재 북한의 바둑인구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아마 6~7단 실력을 갖춘 바둑기사 10여 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짐.

■ **‘페니실린 없고 수술도 마취없이’…北의료체계 유지경(3/13, 연합뉴스)**

- 북한은 무상 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료시설과 의약품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함.
- 13일 북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의료실태는 무상의료라는 선전과는 달리 경제난 심화 및 각종 의약품 부족 탓에 암암리에 치료비를 징수하고, 수술에 필요한 약품도 환자가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함.

- 2.16과학기술상 심의위원회, 박찬영(전력공업성 중앙전력설계연구소 심사원) 등 6명을 2015년 최우수 과학자·기술자로 선정(3.10,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공군총장 “北, 아직 핵무기 장거리미사일 탑재능력 없어”(3/9, 연합뉴스)**
 - 마크 웰쉬 미국 공군참모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 웰쉬 총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을 경우 이에 어떻게 확실히 대처할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함.
 - 웰쉬 총장은 이어 '북한이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북한이 아직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의 본토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 **미국 ISIS “북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보유”(3/9, 연합뉴스)**
 - CNN방송에 따르면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9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탄두 경량화' 주장과 관련,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해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게재한 글에서도 '2020년까지 북한이 많게는 100개까지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소형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민간 전문가는 물론 군 관계자 사이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보유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음.

- **미국 국방부 “북한, 핵탄두 소형화 능력 보여주지 못해”(3/10, 연합뉴스)**

- 벨 어번 국방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힘.
 - 어번 대변인은 그러나 "오관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고려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군사계획을 마련하는게 신중한 행동"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함.
 - 데이비스 대변인은 특히 "북한은 3단계 로켓을 우주에 쏘아올리는 발사실험을 성공적으로 했다"며 "이것은 ICBM에 쓰이는 요소와 정확히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비록 검증되지 않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함.
- **美정보수장, 2년째 "KN-08 실전배치 수순" 공식 평가(3/10, 연합뉴스)**
- 미국 정보당국이 2년째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이 실전배치 수순에 들어갔다는 공식 평가를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됨. 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25일 미국 하원 정보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같은 평가를 내놓았음.
 - 클래퍼 국장은 "우리는 북한이 아직 발사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KN-08의 배치를 위한 초기 수순들을 밟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힘.
 - 이 같은 평가는 지난해 3월25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분과위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 담겼던 것과 동일한데, 이는 당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고 KN-08은 현재 가동중(operational)"이라는 윌리엄 고트니 미국 북부사령관의 발언과 맞물리면서 논란을 증폭시켰고, 급기야 한-미 군당국이 이 같은 실전배치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논란이 가라앉은 바 있음.
 -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KN-08 실전배치 가능성을 공식으로는 부인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만으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과 KN-08 실전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외국 전문가 "북한 공개 물체, 수소폭탄은 아닌듯"(3/10, 연합뉴스)**
- 영국 군사정보업체 IHS제인스의 칼 듀이 수석 분석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 볼 때 그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 탄두에 맞는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그러나 사진 속의 물체가 수소폭탄일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함.

- 그러나 듀이 분석가는 "수소폭탄은 다단계 장치로서 두 개의 독립된 단계가 하나로 합쳐져 좀 더 길쭉한 구조를 갖기 마련"이라며 "사진 속의 물체는 원형이어서 수소폭탄 관련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추정함.
- 화생방무기 전문가인 그는 다만 문제의 물체가 단식의 내폭형 핵탄두(implosion weapon)이거나 수소폭탄 직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밝힘.

■ “北ICBM 美도달능력 갖춰, 핵탄두소형화 능력보유 가정하에 대비”(3/11, 연합뉴스)

-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 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과 캐나다까지 도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 능력을 갖췄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세실 헤이니 미 전략사령관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핵탄두 소형화 주장, 이동식 ICBM 'KN-08' 퍼레이드 등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북한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우리가 이런 문제(위협)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힘.
-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국시간으로 9일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 국방부는 아직 소형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일축함.

■ 북한 핵실험 '증거' 핵물질 검출 어려울듯(3/11, 연합뉴스)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지만 핵실험을 입증할 방사성 입자가 아직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핵실험 부산물을 감추는 북한의 능력이 향상됐음을 시사한다고 비핵화 관련 전문가들이 10일(현지시간) 지적함.
-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는 최근 발표한 이메일 성명에서 "최근 이뤄진 여러 번의 방사성 핵종(核種) 측정 결과는 (핵)실험 결과물이거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발생 원인을) 결론지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함.

- 핵문제 전문가나 외교관들은 핵실험으로 방출되는 대표적 방사성 물질인 방사성 세논의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사라지고, 따라서 북한 핵실험을 입증할 핵물질을 검출하기에는 이미 늦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 **美 ISIS "북, 구소련 원자로 재가동 가능성...안전 우려"(3/11, 연합뉴스)**

- 10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파 서리나 켈러-버간티니 연구원은 "두 곳의 (대북) 소식통들"로부터 북한이 구소련의 'IRT' 원자로를 자체 증축한 뒤 간헐적으로 가동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 ISIS 연구원들은 특히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북한에서 (IRT 원자로에 사용한) 연료봉 부품 2개가 고장난 뒤 녹아버려 대대적인 수리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원자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의견을 보였음.
- ISIS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IRT 원자로 재가동이 북한의 무기용 핵물질 개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서도 영변에서와 비슷한 규모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계속 제기했음.

■ **IAEA 전 사무차장 "북한 핵탄두 소형화 주장, 일축 말아야"(3/12, 연합뉴스)**

-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을 과장으로 일축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탄두 개발의 전형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면서 "핵탄두 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라면 설계를 거쳐 각 부품을 끼워 넣는 실물 모형(mockup)을 제작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최근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원형 물체를 실제 핵탄두로 볼 순 없지만 가짜로 지칭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면서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함.
- 이어 "북한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해당 물체의 특질을 알기 어렵지만 (대기권) 재진입 로켓에 탑재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보인다"면서도 "대기권 재진입

시 압력과 고열을 견딜 수 있는 로켓을 제작하는 기술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며 북한은 아직 그런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나. 미·북 관계

■ 北, 한미훈련에 "총공세 진입할 것" 위협...국방위 성명(3/7, 연합뉴스)

- 북한은 7일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을 개시하는 데 대해 이날 발표한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우리의 생존 공간을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에 전면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보도함.
- 성명은 이어 "적들이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이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핵전쟁도발로 간주된 이상 그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될 것"이라며 "정의의 핵선제 타격전은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에서 지정한 순차대로 실행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 성명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남조선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사정권안에 둔 공격 수단들이 실전 배비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기지와 미국 본토를 과녁으로 삼은 강력한 핵타격 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있다"고 주장함.

■ 美 "북한 핵위협 심각히 간주...도발적 언행 중단하라"(3/8,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 국방위원회가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선제적 핵타격전'을 거론한 데 대해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함.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우리는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다시한번 북한이 도발적 수사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강력히 반발하는 데 대해 "40년간 지속돼온 훈련으로, 북한이 이를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방위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우리가 이 같은 훈련을

계속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함.

- 미국 정부는 그러나 다자·양자 제재와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한 대북 압박 정책의 목표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 커비 대변인은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미 간 협의는 잠재적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젊은 독재자 (김정은을 지칭)가 더 책임 있는 길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그같은 협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함.

■ "올해 1월 북한-미국간 교역 전무"〈VOA〉(3/8, 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8일 미 상무부 통계자료를 인용해 지난 1월 북한과 미국간의 교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하며 "악화일로 걷는 북미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지난해 같은 기간 북미간 교역액은 약 14만 달러였고, 또 지난해의 전체 북미간 교역 규모는 약 480만 달러로 전년도의 약 20%에 불과했음.
-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 등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오바마, 조만간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3/8,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한국시간으로 8일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금주말, 늦어도 내주초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8일(현지시간) 알려짐.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는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양자 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조치를 놓고 한·미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나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제재조치에 대해 "상식적 범주 내에서 제재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함.

■ 북한 "침공 단행하면 도발 본거지 불바다 만들 것"(3/9,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7일 시작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끝끝내 군사적 침공을 단행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상상 밖의 주체적 전쟁방식으로 도발의 본거지들을 순식간에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논평 '우리의 경고를 오판하지 말라'에서 "미국과 괴뢰 역적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연습과 고강도 체재를 운운하며 제아무리 기고만장해 있어도 우리는 꿈쩍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함.
- 통신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생존공간을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 도발광기에 전면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했다"며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무진막강한 우리 공화국을 감히 어찌 보겠다는 것이야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실전 배비(배치)된 핵무기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군사적 공격수단들은 최고 수뇌부의 남조선 해방, 미국정벌 작전계획에 따라 남조선 작전지대의주요 타격대상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 기지들, 미국 본토를 정밀 조준하고 섬멸적인 발사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함.

■ **미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상황 예의주시"(3/10, 연합뉴스)**

-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각종 위협과 관련해 도발적 언행을 삼가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해 왔음.
- 미 국방부는 앞서 지난 7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선제타격 위협을 가한 데 대해 "북한의 그 같은 발언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역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도발적 언행을 삼가라"고 경고함.

■ **케블레어 "北, 핵무기로 공격하면 美 보복받아 정권 끝날 것" (3/11, 연합뉴스)**

-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공개하며 선제공격 가능성을 위협한 데 대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인 일본, 한국에 핵무기 공격을 한다면 극도로 무모한 일일 것"이라며 "보복공격을 받아 북한은 완전히 파괴되고 정권은 끝날 것"이라고 경고함.

- 블레어 전 국장은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는데, 그의 이런 평가는 지난해 5월 북한의 핵 소형화·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기술 확보 주장에 대해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변화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음.
- 블레어 전 국장은 북한의 KN-08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해 "북한은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기술로 부분적 성공을 거뒀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의 서부 지역을 사정거리로 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핵과학자 "우리 수소탄, 맨해튼 떨어지면 주민 전체 즉사"(3/13, 연합뉴스)**

- 조형일이라는 이름의 북한 핵과학자가 13일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오늘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된 핵탄(핵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수소탄(수소폭탄)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려 미국의 뉴욕 맨해튼 상공에 떨어진다면 주민 전체가 즉사하고 온 도시가 잿더미로 되고 만다"고 위협함.
- 기고문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핵탄의 폭발력이 15kt 이하인 무기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우리나라 언론 등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정도로 크기와 무게를 줄인다는 의미로 '소형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비교해 용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임.
- 조형일은 또 기고문에서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서 열핵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 제작된 우리의 핵탄두는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함.

다. 중·북 관계

■ **中 '일대일로'서 북한 통째로 들어냈다…'시진핑 분노' 첫 확인(3/7,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글로벌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북한을 완전히 들어 냈는데, 이는 중국이 그동안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린(吉林)성, 랴오닝(遼寧)성 등 동북 3성 진흥을 위해 공을 들여온 북·중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되

거나 유보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을 시사함.

- 중국이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공개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 사업 보고서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 (13·5 규획, 2016~2020년)' 초안에서 북중 경협이 빠진 데 대해 대북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음.
- 이와 관련,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중기 발전계획에서 북한이 배제된 것은 시진핑의 강한 대북 분노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조치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와 같은 거대 경제협력구상에서 북한을 빼다 고 하더라도 기존에 정상적인 교역과 기존에 진행돼온 경제협력의 틀까지 훼손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북한, 제재 회피하려고 중국 은행 이용”(포린폴리시)(3/9, 연합뉴스)

- 북한이 무기거래 등의 불법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은행을 우회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중국이 그동안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의 이행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미국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P)가 입수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친포'(Chinpo)라는 이름의 싱가포르 선사는 중국 최대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Bank of China)의 싱가포르 지부에 계좌를 두고 있으면서 북한 기업들을 대신해 수백차례에 걸쳐 대북 송금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남.
-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공개하려고 했으나, 중국 측의 반대로 2주간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FP는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차단하는데 있어 글로벌 파워로서의 역할과 북한에 대한 외교적 '빅 브라더'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 입항한 北선박 10일부터 귀환 차단…선박교역 전면금지”(3/9,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수용해 중국 정부가 자국에 들어온 북한 선박이 돌아가는 것도 차단할 방침을 밝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중 무역 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미 입항한 북한 선박이 북한으로 귀항하는 것을 10일부터 금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중국이 북한 선박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전함.
- 또 중국은 본토의 모든 항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목록에 오른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의 입항이 확인되면 조사하고 압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으며, 중국이 강한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이 그간 북한에 느슨하게 대응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함.

■ “유엔 대북제재안 이후 북중 변경 물동량 20~30% 급감”(3/9, 연합뉴스)

- 중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을 넘나드는 물동량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짐.
- 북중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9일 유엔 안보리에서 최근 대북결의안 2270호가 통과된 뒤 북중 접경지역의 다리를 통해 오가는 물동량이 20~3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 또 중국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지만, "일부는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중국 산둥(山東)성에 있는 르자오(日照)항 등에서 일부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거부 사태가 잇따르는 것 등은 그런 선제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 그러나 북중 접경 지역을 넘나드는 물동량이 항상 일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런 변화가 과연 중국의 강경한 대북제재 움직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음.

■ 中, '김정은 똥보3세' 검색차단 해제...대북 제재 일환?(3/9,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돌입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롱하는 호칭에 대한 인터넷 검색어 차단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됨.
- 중국 네티즌이 김 제1위원장을 비판할 때 부르는 이름인 '진싼팡즈(金三반(클반. 月+半)子)'가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에서 그동안 검색이 안되도록 차단돼 있었으나 9일 오전 현재 원활하게 검색되고 있음. 진싼팡즈는 '김씨 일가의 똥보 3세'라는 뜻임.

- 지난해 10월 13일 바이두에서 '진싼팡즈'를 검색했을 때는 '관련 법규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바이두측의 안내문만 뜨고 검색 결과가 일절 나오지 않았는데, 당시는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과 관계 복원의 연장선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조롱조 호칭의 검색을 차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음.
 - 거꾸로, 이번에 검색차단을 해제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용으로 의심받는 장거리로켓 발사에 반대하는 중국측 만류를 뿌리친 데 대한 중국측의 불만 표시중 하나일 수 있으나, 검색 차단이 해제된 시점이 북한의 핵실험 전후인지, 혹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전후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中 항공 대북제제도 착수조짐…“공항 블랙리스트 고려항공조사”(3/10, 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이행 분야를 육로와 해상에 이어 항공 쪽으로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중국 당국은 개인 제재대상에 추가로 오른 북한인 16명의 명단을 공항 측에 통보해 입국금지 등의 조치에 착수하고 고려항공 등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실린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조만간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분야를 육로와 해상에 이어 항공편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하면 육해공 3면을 모두 봉쇄하는 대북 '옥죄기'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일 중국대사 “北, 국제규율 파괴…中안전에도 영향”(3/10, 연합뉴스)**
 -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발사'는 "국제사회 규율을 파괴한 것이며 동시에 중국과 주변지역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함.
 - 10일 중국청년망(中國青年網)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자격으로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협)에 참석한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선(북한)은 당연히 그런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 청 대사는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안 통과 직후 밝힌 '중국입장'을 언급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남북 모두 핵을 가질 수 없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서는 안 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안전이익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함.

- 또 "우리는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고 여긴다"며 "이전 경험을 교훈 삼아 조속히 6자 회담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함.

■ **中, 北에 자극적 언행 중단 촉구...“긴장격화 막아야”(3/10,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모든 남측 자산의 청산 선언과 관련해 자극적 언행 중단을 통해 정세의 긴장 격화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각국이 마땅히 자극적인 언행을 일절 중단함으로써 정세의 추가적인 긴장 격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는 각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함.
- 북한은 이날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함.

■ **[단독]홍콩, 안보리 제재대상 北선박 '골드스타 3' 입항 거부(3/10, 연합뉴스)**

- 10일 중국 대북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9일 정오께 연료와 선원용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홍콩항에 입항하려던 북한 화물선 '골드 스타 3'의 정박을 안보리 제재를 사유로 거부함.
- 골드스타 3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목록에 오른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가운데 하나이며, 선적은 캄보디아 로 돼 있음. 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편의치적' (便宜置籍) 제도를 활용해 국적 위장을 한 것으로 추정됨.
-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고도의 자치와 행정권을 보장 받은 홍콩은 유엔 제재 사항을 중국과 별도로 이행하고 있는데, 외국 선박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홍콩이 이례적으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것은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국제 사회의 분위기에 발맞추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됨.

■ **“북한 300mm방사포 운반 트럭, 중국회사 제조 차량과 거의 동일”(3/10, 연합뉴스)**

- 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공개한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 300mm 방사포 운반 트럭은 중국 회사가 만든 제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사실은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북한으로 넘어가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이 트럭을 만든 회사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판매했다고 해명함.
- 보고서는 또 2012년 4월 15일과 지난해 10월 10일에 각각 모습을 보인 벤츠 차량은 유럽에서 만들어져 미국에서 방탄장치를 한 뒤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 전문가들이 베트남에 파견돼 군사훈련을 해 주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이 국제기구에 인력을 파견해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적시함.

■ 中 언론,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촉각'(3/10, 연합뉴스)

- 중국 주요 언론이 1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서울발 기사에서 연합뉴스를 인용, 북한이 이날 오전 한반도 동해 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으며, 이 미사일이 스커드 계열로 추정된다는 한국군 당국이 상황을 추적·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함.
- 홍콩 봉황망(鳳凰網)도 연합뉴스 보도와 외신 보도 내용을 함께 전하면서 "북한이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채택된 당일(3일)에도 동해 상에 수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을 강조함.

■ 북한 석탄 수입금지 여파 中 북방지역 난방비 상승(3/11, 연합뉴스)

- 북한 핵도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대중(對中) 광물 수출이 막히면서 중국 북방의 석탄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음.
- 11일 중국항구망(中國港口網)에 따르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앞서 지난 1일부터 북한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항 등 항구에서 석탄을 비롯한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산둥(山東)성 리자오(日照)항을 통한 광물 수입도 차단함.
- 중국 북방에 수입되는 북한산 석탄은 대개 겨울철 주택 난방용으로 소비되는데

수입금지로 인해 최근 북방도시 난방비가 올랐음.

- 리자오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한 무역상은 중국항구망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난방 및 공업용 석탄 수급에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다른 수입처를 물색해야 할 처지라고 전함.

■ 中 "중량미달 北 무연탄 48건 적발...손실배상 요구"(3/12, 연합뉴스)

- 중국 산둥(山東)성 룡커우(龍口)항 검역국은 11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반입된 북한산 무연탄 가운데 심각한 중량 미달로 적발된 사례가 48건에 달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수치에 비해 중량이 21.7%나 미달해 허용치인 0.89%의 24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이에 중국의 수입업체들은 북한 측을 상대로 20만 6천100 달러(2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손실 배상을 요구했고, 지난 1월 말까지 3만 5천100 달러 (4천 100만 원 상당)를 회수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산 광물의 중국 수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의 검역 당국이 북중 광물교역의 '치부'를 스스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

라. 일·북 관계

■ 日관방, '北핵탄두 경량화' 보도에 "도발행동 자제해야"(3/9,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은 도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한국 등 제후국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북한에 대해 도발 행동 자제와 안보리 결의, 6자회담 공동성명 준중을 요구한다"고 밝힘.
- 스가 장관은 "북한의 핵 경량화 여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피하겠다"면서 "우리는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면서, 긴장감을 갖고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日, '北 미사일발사'에 NSC소집...아베 "결코 용인못해"(3/10,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0일 북한이 동해 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추가도 도발"로 간주하고 중국 베이징의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항의했고, 이날 오전 총리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함.

- 아베 총리는 관계 성청(부처)에 한·미 등과 연대해 정보수집 및 분석에 전력을 기울이고 항공기, 선박 등의 안전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음.
- 아베 총리는 또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거론한 뒤 "북한이 추가 도발 행동을 취했다"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항하는 군사적 시위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내렸으며, "(북한이 발사한) 두발 모두 스커드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대해 정보 수집 및 경계감시에 나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임.

■ **외무상 "김정은 핵실험 계속 지시 용인 못해"(3/11,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실험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핵 개발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은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함.
-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아울러 지난 10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서도 "강력 항의한다. 일련의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한 자리에서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과 핵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마. 러·북 관계

■ **"北 김영철, 유엔제재 결의전 러시아 극비 방문"〈RFA〉(3/11, 연합뉴스)**

-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직전인 이달 초 러시아를 극비 방문했다는 주장이 나옴.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김영철 비서가 베이징을 거쳐 모스크바로 날아가 러시아 당국자들과 유엔 제재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시켰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김영철 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 키를 쥔 상임이사국 러시아를 움직여 결의안 채택에 제동을 걸기 위한 외교적 행보로 보인다고 RFA는 전했다.

바. 기타

■ 중국 내 북한은행 '전무'...안보리 금융제재 효과 의문(3/8, 연합뉴스)

- 현재 중국 내에서 영업 중인 북한은행은 사실상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융제재 효과에 의문이 제기됨.
- 안보리의 결의 2270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 있는 북한은행 지점을 90일 이내에 폐쇄하고, 신규지점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 등은 중국당국이 이 조치를 '성실'하게만 이행하면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 자금줄을 마짜 조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해왔음.
- 복수의 베이징(北京)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8일 연합뉴스와의 접촉에서 "중국 내에는 현재 정상적인 금융업무를 하는 북한은행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전했으며,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다수 북한상인은 중국은행에 개설한 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주고받음.
-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의 금융제재가 실제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는 결국 '중국의 결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중국이 그동안 사실상 묵인해온 환치기, 차명계좌 이용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북한주민의 의심스러운 계좌를 조사해 동결·압수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임.

■ 한·미·일·EU, 연쇄 양자제재...이중삼중 '北 옥죄기'(3/8,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5일 만에 또다시 대북제재의 칼을 뽑아들었고, 안보리 결의 전후로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북한에 대해 이중삼중의 제재 올라미를

치는 모습임.

- 미국은 안보리 결의 채택 당일인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북한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에 지명했으며, 안보리 결의에 앞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은 대북제재법안(H.R.757)을 발효시켰음.
- EU도 현지시간으로 4일 안보리 결의에서 제재대상으로 추가한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을 자체 제재대상 명단에 올렸으며, 일본도 지난달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등의 독자제재를 결정했음.
- 양자제재 확대와 함께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음.

■ 中 '5자접촉' 공개적 언급...비핵화·평화협정 군불 때나(3/8, 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인 이날 베이징(北京)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도움만 된다면 우리는 각국이 제기한 3차, 4차, 나아가 5차 접촉까지를 포함해 모든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중국 측이 공개적으로 3차, 4차, 5차 접촉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임.
- 우리 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 측의 '개방적'이라는 말은 우리 말로 '열려 있다'는 의미이지만, 이는 지지한다 또는 수용한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이라면서 "중국 측이 과거보다는 다소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5자회담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함.
- 중국 측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국면에서 주장해온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5자회담 가능성을 흘리면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분석이 나옴.
- 중국 측의 움직임은 최근 미국 측의 반응과 맞물려 더욱 주시를 받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에만 올인하는 사이 미중이 일정 시점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매개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이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중국도 제재대상 北선박들 입항거부...국제사회 제재이행 본격화(3/8, 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들의

입항을 줄줄이 거부하는 등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본격 착수함. 필리핀과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도 본격화되는 양상임.

- 중국 산둥(山東)성 르자오(日照)항 관계자는 8일 로이터통신에 북한 화물선 '그랜드 카로'가 며칠 전 입항하려고 했지만 정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 가운데 2척도 중국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함.
- 러시아의 경우도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지역에서 북한인 벌목공들을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지금까지 입항을 거부당하거나 몰수된 북한 선박은 최소 6~7척 정도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31척 가운데 상당수가 추적을 피하려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것으로 나타남.

■ 유엔 "도발적 화법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해야"(3/10, 연합뉴스)

-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정오 브리핑에서 "김 제1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언급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반도 문제의) 모든 당사국은 상황을 진정시키고 그런 레토릭(화법)을 중단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완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하크 부대변인은 "반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그런 주장을 검증할 기회나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우리는 그런 주장이 맞거나,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북한이 IAEA에 충분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임.
- 하크 부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남한 선제 핵타격'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우리는 북한이 그런 도발적 화법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강조함.

■ "아프리카 기니, 북한 외화벌이 협력 지속"(RFA)(3/10, 연합뉴스)

- 아프리카 북서부의 대서양 연안국인 기니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화벌이에 협력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일간지를 인용해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민주콩고 일간지 르 포팅시엘은 최근 "북한이 기니에서 정보통신 사업과 건설업으로 큰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기니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핵심 자금 공급원이 되고 있다"고 보도함.
- 특히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기니에는 북한의 정보통신 전문업체인 '조선컴퓨터센터'가 진출해 대통령 경호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라고 보도했다고 RFA는 전하며, "북한이 각종 최첨단 경호 및 감시장비와 함께 통신 보안 시설을 제안하자 신변불안을 느끼는 기니 대통령이 크게 만족하고 요구 금액인 30여억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임.
- 또 북한 건설업체인 '코젠'사는 지난 수년간 수백명의 북한 노동자를 기니에 진출시켜 다양한 관급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짐.

■ **오준 "북한 반발 예상...또 도발 땀 안보리 제재 더욱 강화"(3/11, 연합뉴스)**

-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11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주제로 강연을 한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안보리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함.
- 그는 "이번에 예상보다 훨씬 강한 합의가 도출된 것 자체가 북한에 메시지가 돼야 한다"며 "북한은 또다시 도발할 경우 이 같은 합의가 더 강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과 함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그는 중국이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을 미국에 제안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힘.

■ **반기문,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결의 이행하라" 촉구(3/11, 연합뉴스)**

-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오 브리핑에서 전날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반 총장의 입장을 묻자 "반 총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고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답함.
- 이어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 당사국들과 함께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반 총장의 약속을 재확인함.

- 中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 구체적 방안 도출할 것"(3/12, 연합뉴스)
 - 12일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러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6자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대 공약수"라고 말했다.
 - 특히 "다음 단계로, 우리는 이 아이디어에 대한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것"이라며 "중국은 언제든지 각방(각국)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임. 왕 부장은 "만약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한 의견(이견)이 있다면, 더욱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음.
 -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 방안이 어느 정도의 추진력을 보이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으나, 미 국무부 역시 3일(현지시간)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미묘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이 방안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도 나옴.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역대 최대규모 연합훈련 돌입…한반도 긴장 고조(3/7,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이 7일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연합 훈련을 시작했으며,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자 우리 군은 즉각 북한에 대해 무모한 도발에 나선다면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오는 18일까지,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됨.
 - 이번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은 각각 7천여명, 1만여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은 2천500여명으로, 대부분 키리졸브 연습에 참가하고, 나머지 병력은 미국 본토를 포함한 해외에서 들어오는 증원군임.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한국군 병력은 약 30만여명임.
- 美국무부 "비핵화가 최우선…어떤 대화든 비핵화가 핵심"(3/9, 연합뉴스)

-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함.
-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 기반한 진정성 있고 믿을 만한 협상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말해 왔다"면서 "동시에 어떤 대화든 비핵화가 핵심이며,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함.
- 이는 국무부가 최근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 병행'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입장을 취해 일부 해석상의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어떤 대화나 협상이든 조건없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미 정부의 확고한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 것임.

■ **한미, 전시 공군작전 지휘부 최신화한다…“정보공유 강화”(3/9, 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군이 연합 공군작전 지휘부인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최신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양국 군은 KAOC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정보공유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임.
- 한미 군이 KAOC의 재설계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은 최신 장비 도입뿐 아니라 한미 군의 정보공유체계를 보다 긴밀하게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KAOC의 최신화 작업과 별도로 우리 군이 도입하는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미군이 운용 중인 고공정찰기 U-2의 정보체계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미 군은 올해 안으로 오산기지의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미군 연동통제소(JICC)를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16'으로 연결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김홍균 6자수석 “비핵화 최우선…北 추가도발시 더 강력 대응”(3/12,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한국 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협의한

뒤 취재진에 한·미 양국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배격 하고 계속 도발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철저한 제재 이행에 집중해야 하며 대화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함.

-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의 만남은 지난 2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처음이며, 김 수석이 성김 대표와 만난 것도 처음임.
- 김 수석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자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함.
- 그는 "특히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 역할을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한·미·중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앞으로 안보리결의 이행 및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과 관련해 그는 "3자, 5자 같은 그런 다각적 협의 틀을 심도있게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함.

■ 한미, 최대규모 상륙훈련…압도적 전력으로 '北 핵심' 파괴(3/12, 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군이 11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최대 규모의 입체 상륙훈련을 하며 유사시 북한 후방 지역으로 강하게 파고드는 능력을 배양했음.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에 속하는 쌍룡훈련 중에서도 핵심 훈련인 이번 상륙 훈련은 병력과 장비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음.
- 이번 훈련에는 한미 해병대 1만2천200여명(한국군 3천여명, 미군 9천200여명)과 해군 5천여명(한국군 2천여명, 미군 3천여명)을 합해 1만7천200여명이 참가했으며, 유엔군사령부 소속 호주군 130여명과 뉴질랜드군 60여명도 훈련을 함께 했음. 장비 면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강력한 무기가 투입됐음.
- 이번 훈련은 예년에 비해 지상작전 기간과 내륙 침투 거리가 각각 2배로 늘었는데, 한미 해병대가 유사시 북한 핵심 시설로 고속 침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임.

■ 美핵함모 존 C. 스테니스호 부산 입항…대북 경고메시지(3/13, 연합뉴스)

-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가 13일 오전 11시께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음.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 기간에 미국이 존 C. 스테니스 항공모함을 한국에 보내는 것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임.

-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만인 지난 1월 10일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를 한국에 전개했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9일 만인 지난달 16일에는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를 한국에 파견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스텔스 전투기 F-22 4대가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했음.
- 미국이 전략무기를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한의 대형 도발에 맞서 한국 방어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군 관계자는 "미국은 전략무기를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의 무모한 '불장난'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함.

■ 리퍼트 "北비핵화, 최우선순위…강력한 제재이행에 초점"(3/13, 연합뉴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11일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비핵화 우선'을 강조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언급, 주한 미국대사관 성명 등을 거론하며 "북한과의 평화체제에 관한 우리(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비핵화가 제1의 우선순위"라고 밝힘.
-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및 평화체제 병행 추진과 관련, 한미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불식하려는 의도된 발언으로 풀이됨.
- 그는 "북한에는 외교적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다"면서 "우리가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한 것은 선택지를 좁힘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리퍼트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카드가 아니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딜(거래)'의 일부가 아니다"면서 "커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용"이라고 강조함.

나. 한·중 관계

■ 왕이 "한반도 긴장 키우는 행동 안돼"(3/7, 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

- 자와 협조하고 있다며, 각국이 한반도에 긴장을 키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이 보도함.
- 왕 부장은 "결의 2270호가 6차 회담 재개를 명확하게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이라고 설명함.
 - 왕 부장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연합훈련을 시작하고 북한이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핵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절대로 문 앞에서 전쟁과 난리가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 **中언론 "한미 군사훈련, 한반도 긴장 고조" 비판(3/8, 연합뉴스)**
-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8일 사설에서 7일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불필요하게 끌어올린다고 주장하며 "남북한의 위협 교환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자칫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양측이 군비 증강에 의존하면서 서로 자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함.
 - 사설은 "김정은 정권이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북한이 절멸을 감수하고 선제적 핵 공격을 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 국방위원회의 '선제적 핵타격' 위협도 비판함. 그러면서 "북한 정세가 요동치면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한국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만장일치 강력 제재로 응답한 상황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불필요하게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올린다"며 비판함.
- **中, 韓 독자 대북제재에 "일방적 제재는 문제해결 방법 아냐"(3/9,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9일 한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해 일방적 제재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며 반대와 우려 입장을 피력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집행하겠지만, 일방적인 제재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방적

- 제재가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밝힘. 이는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 발표 이후 처음 나온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임.
- 그러면서 그는 2270호에는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며 "우리는 각 당사국이 이 결의를 전면적이고 균형 있게 집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함.
 - 한편 그는 북한의 새 이동식 다연장로켓포(MRLS)에 중국산 트럭이 쓰였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한결같이 충실히 집행함으로써 스스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안보리의 금지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은 앞으로도 엄격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함.

■ **홍준표, 中대사 면전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3/11, 연합뉴스)**

-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경남도를 방문해 홍준표 지사와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추 대사는 지난달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며 '한중관계 파괴론'을 언급해 우리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았지만, 이날은 한국과 우호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함.
- 그는 "정치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중국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며 "양국 무역교류와 함께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며 "1천만명을 돌파한 양국 인적 교류를 2천만명 규모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비자편리 제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함.
- 홍 지사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사드 배치로는 한반도 군사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 핵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제는 북한이 중국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마냥 중국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덧붙임. 그는 "사드 배치는 중국에는 불쾌한 문제지만 우리나라에는 생존의 문제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로 생존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함.

다. 한·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한·러 관계

■ 러 “한반도 긴장, 통제선 넘지 않게 당사국들 자제해야”(3/7,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보국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정세 전개가 점증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핵위협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과 관련 당사국 모두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섬.
- 외무부는 "7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은 형식상 계획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참가 부대 규모와 수, 종류 등과 작전 유형 등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당연히 이같은 군사활동의 대상으로 지목된 국가인 북한은 자국의 안보에 대해 합당한 불안울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 외무부는 이어 "동시에 현 상황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도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적대 세력(한국과 미국)에 '선제 핵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공개 성명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함.

■ 러,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국 참여 중단에 신중 반응(3/9, 연합뉴스)

- 러시아 측은 9일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의 하나로 취한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중단 결정에 대해 논평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날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결정에 대한 러시아 측의 의견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아직은 관련 코멘트를 삼가고 있다. 정보를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힘.
- 러시아 측은 논평 자제는 프로젝트 참여 중단 결정을 내린 한국 측에 대한 불만을 표시함과 동시에 향후 상황 변동이 있을 경우 협상을 재개할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로 해석됨.
- 우리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러시아 측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러시아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유감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측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예외로 인정받았으나,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의 하나로 제3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한국 측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는 사실상 중단됨.

마. 미·중 관계

■ “美정부가 수출 금지한 中기업 ZTE, 북한과도 거래”(3/7, 연합뉴스)

- 중국 뉴스포털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은 미국 상무부가 8일부터 ZTE(중싱 <中興>통신)에 미국산 장비와 부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기업은 미국 정부에 사전 수출 허가서를 신청하도록 한다고 지난 6일 보도했는데, 이 경우 수출 허가 신청은 통상 거부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수출 금지 조치나 마찬가지임.
- 이는 ZTE가 미국의 대이란 수출 금지령을 어기고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델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어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 이란 최대 통신사인 TCI에 공급한 데 따른 것임.
- 미국 상무부가 이란과의 거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입수한 ZTE의 기밀 내부 보고서에는 ZTE가 이란뿐만 아니라 북한 등과도 거래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7일 보도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내법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중단함으로써 중미 경제협력과 양국관계를 훼손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함.

■ [단독]성김 美특별대표 “비핵화가 최우선…중국과 비밀거래 없다”(3/9, 연합뉴스)

-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8일(현지시간) 중국이 비핵화-평화협정 논의의 '병행'을 제안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한국이 모르는 중국과의 비밀거래는 없다(no secret dealing)"고 이날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밝힘.
-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고 제안한 이후 미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비핵화 우선'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됨.
- 김 대표는 중국의 '병행' 제안에 대해 "중국이 낸 아이디어를 공식 제안으로 보기는에는 조심스럽다"며 "중국이 말하는 것은 (6자회담 내) 5자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한은 평화협정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보자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그는 "(중국의 제안을 놓고는) 한국 정부의 당국자들과 매우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하고 있으며, 모든 측면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한국이 모르는 중국과의 비밀 거래는 없다"고 거듭 밝힘.

바. 미·일 관계

■ 日방위상, 美국방차관보에 미군비행장 이전공사 중단 설명(3/7,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 공사 중단 방침에 대해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임.
-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후텐마비행장의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이전과 관련한 소송에서 정부가 오키나와현과 화해하기로 하고 관련 공사를 중지한 상황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임.
- 회답에서는 또 미일동맹에 의한 억지력 확보 및 후텐마비행장이 기노완시 한복판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헤노코로의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양측이 재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함.
- 이 밖에 두 사람은 이날 시작된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및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가속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임.

사. 미·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아. 중·일 관계

■ 주일 중국대사 "일본의 대중포위, 시작부터 잘못된 것"(3/10, 연합뉴스)

- 청용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는 일본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개입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남중국해 긴장을 격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함.
- 10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중국청년망(中國青年網)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자격으로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양회(兩會·

- 전국민대표대회와 정협)에 참석한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또 일본은 중국이 자신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령됐던 도서지역을 수복한 것을 비롯해 많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고 덧붙임.
 - 청 대사는 중일관계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일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언행 때문에 "(관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중국위협'을 빌미로 신안보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함.

자. 중·러 관계

■ 중·러, 反사드 6자회담 공조 가속... '동북아안전대화' 개최(3/7, 연합뉴스)

- 중국, 러시아가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에 대응해 본격적인 '공조 행보'에 돌입함. 7일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제2차 '중러 동북아안전협상' 모임을 열고 글로벌 현안과 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함.
- 양측은 이 접촉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미국과 한국의 행동이 지역긴장을 끌어올리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며 중러 양국의 전략적 안전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사드 배치에 대한 엄중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의 뜻도 표명했음.
- 북한을 겨냥해서도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진지하게 집행해 조선(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효과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러의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한 양측은 동북아 안보 갈등 문제가 두드러지고 지역안보 상황이 한층 복잡·민감해진 상황에서 소통·협력을 강화해 서로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수호하자고 약속했음.

■ 중·러 외교수장 "사드배치 반대...북한, 핵협상 나서야"(3/11,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로 밝히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철저하게 이행돼야 하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함.

- 왕 부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질문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방어적 목적'을 초월하는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중-러 안전을 위협하며 지역 안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함.
- 라브로프 장관도 "우리(중국과 러시아)는 미사일 방어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사드 반대에 대한) 주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 왕 부장은 "양국은 모두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고,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국제앰네스티 “북한, 탈북자 가족 통화 감청…적발 땀 정치범수용소 보내”(3/9, 경향신문)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휴대전화 등 통신 감시를 강화하는 가운데, 최신 장비를 도입해 탈북자 가족 간 통화를 감청하고 적발되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 앰네스티는 3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를 발표했다.
 - 앰네스티는 “북한이 절대적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외국으로 탈출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불필요하고 정당한 목적이 없는 통신 감시 및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을 탈출한 40대 여성은 “중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는데 배낭을 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붉은빛이 깜빡이는 안테나 모양의 장비를 손에 잡고 있었다”며 “보위부 요원은 그것이 탐지 장비라고 말했고, 그가 코트를 벗자 몸에 전선이 감겨 있었다”고 증언했다.
 -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은 외국으로 전화하기 위해 브로커와 함께 중국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국경지대로 가야만 함.
 - 북한주민이 외국으로 건너간 가족들과 연락하려면 중국 접경지에서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내고 통화하는 길밖에 없고, 이들은 감청을 우려해 통화를 최대한 짧게 하며 가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北, 북한인권법 비난…“남북 관계개선 여지 말살” 주장(3/10,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대결악법”이라고 비난했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월 10일 ‘북남관계를 칼탕친 최악의 정치적도발’이라는 글에서 “(북한인권법은) 있지도 않는 ‘북인권’ 문제를 여론화해 북남사이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관계개선의 여지조차 깡그리 말살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 그러면서 이 법의 통과가 “‘북인권증진’ 간판 밑에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 제도의 영상을 흐려놓고 남조선 사회에 극도의 대결 기운을 고취해 ‘체제통일’의 망상을 실현해보려는 극악무도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음.
 - 신문은 ‘조국통일성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라는 글에서는 3월 7일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백두산혁명강군은 미제와 괴뢰호전광을 쓸어버릴 멸적의 기상과 의지를 안고 조국통일성전의 공격진지에서 징벌의 총창을 베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우리의 거둬진 경고를 무시하고 사소한 군사적망동이라도 부린다면 백두산혁명강군은 정의의 통일성전으로 원수들을 가차없이 격멸하고 민족의 최대수원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했음.
- HRW “유엔, 북 강제노동 피해자 보호 나서야”(3/11, 자유아시아방송)
- 휴먼라이츠워치는 3월 11일 성명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UNHRC) 회원국들이 북한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북한인권 문제 해결책을 모색할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을 구성해 북한 내 인권 유린 관련자에게 그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은 물론 여성과 학생, 청소년, 수감자 그리고 해외 파견 노동자에게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 당국은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차별 혹은 처벌의 일환으로도 북한 주민들을 강제노동에 내모는데 이는 북한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임.
 - 이 단체는 또 강제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지독한 인권 침해인데도 많은 북한 주민들은 이런 인권유린을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피셔(John Fisher) 제네바 국장은 현재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오는 3월 14일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소개했음.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회의에 출석해 그의 임기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 피셔 국장은 또 이날 휴먼라이츠워치 등 8개 인권단체들이 모여 강제노동 관련 인권유린을 당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커비, '북 인권 개선' 15개 방안 제시(3/11,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UN COI) 보고서 발간 2주년을 맞아 '조사위원회: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음.
- '유럽북한인권협회'의 마이클 글렌디닝 공동대표는 3월 11일 이번 행사가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 발간 2주년이 넘도록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권고 이행이 많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임.
- 토론회에는 호주의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을 비롯해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유럽국가와 한국에서 정책입안자, 법조인, 학자, 외교관, 언론인, 인권운동가, 탈북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음.
- 폐막 인사에 나선 커비 전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모든 방안에 마음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국제법 적용을 위한 증거수집, 차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북한 인권 범죄를 계속 감시할 전문가 위원회 구성,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북한 주민에게 알릴 것,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우발적인 핵 위기에 대한 인식 등 15가지 방안을 제시했음.
- 이날 '북한인권의 현주소'라는 첫 번째 토론회를 이끈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한국학과의 램코 브뢰커(Remco Breuker) 박사는 북한인권 실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후 2년 여가 지났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주목했다고 전했다.

2. 북한인권

■ **유엔 안보리 이어 인권이사회도 조만간 '북인권 결의' 채택(3/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성안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달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제출할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북수의 정부 소식통이 3일 8일 밝혔음.

- EU와 일본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한인권 관심국들과 협의를 진행한 뒤 관심국들에 초안 문안을 회람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 특히 올해 인권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압박이 강화되는 와중에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됨.
- 우리 정부도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예년보다 강화된 표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협의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음.
- 이번 결의안에서 내용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 문제와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등이 거론됨.

■ 세계 여성의 날 “북한, 여성 인권 사각지대”(3/11, 미국의소리)

- 영국 의회의 초당적 모임인 북한그룹(APPG-NK)은 지난 3월 8일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 여성의 인권 현실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음.
- 이 그룹의 공동의장인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은 ‘북한의 잊혀진 여성들에 대한 기억’이란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 여성들이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고질적인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음.
- 브루스 의원은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한 회의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에 성차별과 관련된 인권유린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대북 관여정책을 활용해 실질적인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여성 차별이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특히 강간 등 성폭력과 고문, 강제 낙태,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음.
- 이와 함께 북한이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지만 이런 차별이 오히려 국가정책에 기반 해 있고,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개선 압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대외적으로 여성과 어린이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제 인권단체들, 북한 강제노동 관련 토론회 개최(3/12, 미국의소리)**

-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안팎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3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휴먼 라이즈 위치를 비롯한 7개 국제 인권단체 주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는 마루주끼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존 시프턴 휴먼 라이즈 위치 아시아담당 국장, 그리고 탈북자 3명이 참석함.
-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탈북자 가운데 1명인 김행옥 씨는 북한주민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에 대해 증언하며, 탈북자 안수림 씨는 보상 없이 군대에서 8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자신의 경험을 전할 예정이다.
-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탄압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탈북자는 쿠웨이트에 파견돼 일했던 경험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 휴먼 라이즈 위치는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이 북한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음.
- 이 단체는 또 북한이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 수감자, 아동, 그리고 해외 송출 노동자들에게 조직적으로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말했음.

■ **유럽 탈북민 단체, 브뤼셀서 북한 인권유린 중단 촉구 행사(3/13, 연합뉴스)**

- 유럽의 탈북민 단체인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는 3월 12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북한의 핵개발 및 인권유린 중단을 촉구하는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음.
- 유럽총연은 브뤼셀 엑스포 전시장에서 아시아 문화 축제인 ‘메이드인 아시아’가 열린 것을 계기로 전시장 앞 광장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상과 고문, 폭행 등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사진 100여 점을 전시하고 성명서와 소책자를 배포했음.
- 유럽총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아시아 각국이 유럽과 다양한 문화, 정치경제 협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으며, 더 이상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는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음.
- 이 성명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핵시설 건설과 방사능 포집 작업에도 동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억울한 누명을 쓴 주민들에게 다시 가혹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폭로했음.

3. 탈북자

- 특이동향 없음.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유엔 대북 긴급구호기금 800만 달러, 영양·보건 사업 집중(3/8, 미국의소리)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올해 초 대북 사업에 배정했던 800만 달러를 유엔 5개 기구의 영양, 보건 사업에 집중 지원했음.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앤드류 코비린스키 공보관은 3월 7일 'VOA'에 이 자금이 취약계층에 치료용 음식(therapeutic feeding)을 지원하고 급성 영양실조를 치료하며, 북한 내 11개 도에 필수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면서 이 자금으로 5세 미만 어린이 180만여 명과 30만 여 명의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210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기구는 세계식량계획으로 미화 287만 달러가 지원됐음.
 - 이 자금은 세계식량계획의 영양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임.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취약계층 2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하

고 있음.

-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인 265만 달러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됐는데, 이 지원금은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고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취약계층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예정임.
-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건 사업에도 100만 달러가 지원돼 저체중아의 생존율을 높이는 등 취약계층의 생명을 살리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임.
- 이밖에 식량농업기구 FAO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의 콩 생산 증대 사업에 80만 달러, 유엔인구기금의 보건 사업에 70만 달러를 지원했음.
- 앞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지난 1월 올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중앙긴급 구호기금 CERF를 통해 ‘자금부족 긴급 지원금’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70%인 2천5백만여 명이 질과 양 면에서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FAO, 북한 식량부족국가 재지정(3/9,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3월 9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6년 1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부족 국가군에 포함시켰음.
-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상반기 가뭄에 이어, 8월에는 함경북도와 라선지역에서 큰물피해가 컸다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전년도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음.
-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수입하거나 인도주의 국제지원으로 메워야 할 식량 부족량이 약 44만 톤에 이르지만 40% 가량인 약 17만 6천톤 확보에 그쳤다고 지적했음.
- 북한 당국이 수입한 곡물은 약 8만 7천 톤으로 1년 전의 약 30만 톤의 30% 수준으로 줄었고 국제사회 지원도 약 8만9천 톤으로 전년도의 12만 1천 톤과 비교해 크게 줄었음.
- 식량농업기구 대변인은 이 같은 규모는 식량농업기구가 지난해 12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4분기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와 비교해 식량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북한의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도정한 쌀 약 190만 톤, 옥수수 246만 톤 등으로 전년에 비해 약 18만 3천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농기계와 비료 등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음.

■ **스위스, 대북 영양 지원 400만 달러(3/10,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3월 10일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스위스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사업에 미화 4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음.
- 이번 400만 달러 지원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대상으로 한 영양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임.
- 세계식량계획은 스위스의 기부금으로 분유를 구입해서, 어린이를 위한 영양강화 비스킷과 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강화 식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할 계획임.
- 즉, 우유에서 지방을 분리 제거한 뒤 건조시킨 탈지분유로 만든 뒤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품가공 공장에서 ‘수퍼 시리얼’, 즉 혼합영양강화식품으로 가공하는 것임.
- 이 밖에도,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처(SDC)는 올해 북한에 1천300t의 분유를 지원할 예정임.

■ **“유진벨 재단 결핵 치료약 대북반출 승인 검토 중”(3/10, 데일리NK)**

- 통일부는 3월 10일 북한의 결핵치료 지원사업을 해온 유진벨 재단이 북한으로 결핵 치료약을 보낼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음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분야, 시기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 당국자는 ‘결핵 치료약이 지원되면 사람도 (북한으로) 가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몇 명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앞서 유진벨재단은 3월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다제내성결핵(중증결핵) 환자 1500명이 치료약을 제때 받지 못해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처했다고 전한 바 있음.
- 유진벨재단은 “남북 간의 오랫동안 이어져 온 긴장상황과 때때로 발생했던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남한에서 구입한 결핵 약을 북한 결핵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정부에 결핵 치료약 대북 반출 승인을 촉구했음.

8. 북한동향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조사통보(3.6)] 南 여성인권 유린 사례들을 거론 ‘여성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는 박○○패당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는 파쇼강패들이고 범죄자들’이라며 ‘역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어 비참한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대통령 실명 거론 재차 비난 (3.6, 중앙통신)
- ‘北 인권법’ 국회통과 관련 ‘사상 유례없는 대결악법’이라며 ‘북남관계는 완전히 결판나고 불과 불의 대결만이 남은 최악의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3.10, 중앙통신·노동신문 /북남관계를 칼탕친 최악의 정치적 도발)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